

그린수소 산업 육성 국제협력 강화

도·UAE 알 파탄 그룹·엘텍유브이씨, 파트너십 구축 김관영 도지사 “그린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만들 것”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UAE) 알 파탄 그룹(AL FATTAN GROUP), 알 파탄 엘텍유브이씨 그린에너지(AL FATTAN LTechUVC Green Energy LLC), (주)엘텍유브이씨는 업무 협약을 맺고 전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수소 산업 육성과 활용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알 파탄 그룹(AL FATTAN GROUP)의 모하메드 라시드 무사바 알레마디 회장, 알 파탄 엘

텍유브이씨 그린에너지(AL FATTAN LTechUVC Green Energy LLC)의 칼리드 모하메드 라시드 무사바 알레마디 회장 (주)엘텍유브이씨의 공동대표인 김세호 대표, 이지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수소 산업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야 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알 파탄 그룹은 아랍 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준공기업

으로 군합, Oil&Gas 시설, 해양·육상 건설분야에서 정부를 대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알 파탄 에너지는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원자력,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이다.

알파탄 그룹은 알파탄 에너지 자회사들 통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알 파탄 엘텍유브이씨 그린에너지를 지난 3월 17일 (주)엘텍유브이씨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법인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내 200MW급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협약당사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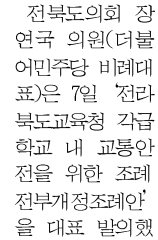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면서 양측의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UAE는 중동·아프리카 최초로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육성 중인 수소 산업 선도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전북과 UAE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민금 신항만의 수소특화 항만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전라북도를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와 전북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학생 교통안전 전반 사항 새로 규정

장영국 도의원, 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장영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를 학교 내 교통안전 전부를 개정할 것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 반 운영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포함,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윤정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위 공동자신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며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결사 반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한목소리... “국민 건강·안전 위협 수산물 수입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사 반대에 동참하고 나섰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위 공동자신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며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는 물론 일본

어업·농업단체, 관광업계 등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오염수 수집과 분석 등 과학적인 검증조차 없는 그야말로 ‘들러리 수준’의 시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염수가 해양에 일단 투기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며 그 영향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음에도 일본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버릴 끝없는 내물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독단·사당화’ 논란 재점화 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확산

이 대표, 이태원 참사 위문장 내장 후 당 지도부에 일방통보 비명계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일각서는 ‘사퇴’ 주장도

이태원 참사 위문장 내장 후 당 지도부에 일방통보한 비명계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일각서는 ‘사퇴’ 주장도

이태원 참사 위문장 내장 후 당 지도부에 일방통보한 비명계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일각서는 ‘사퇴’ 주장도

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매듭지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경영에게 출연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부터 자신의 결함이 안고 출발했고, 여러 리더십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에서 제대로 발휘도 못 했고 돈 봉투 사건이나 최측근 갑부인 김인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후에 책임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엔 드러났으니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신이 되겠다”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사실상 통보가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은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사집중에서 “혁신위원장 임명만 최고위와 협의의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아무도 이이시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보안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러냐고 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은 더 전에 이 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주었다면 결과적으로 인사 참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권·시민단체 “이달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참사 발생 7개월 넘도록 상정 안된 것에 국회 책임 커 특별법, 한국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계 일원들이 이달 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4당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과연 국가가 있었는지는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저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영차의 거리에 선 유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참사 이후 222일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4월 20일 188명의 국회의원이 이태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들의 절박한 열망이며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농성 기간 매일 국회를 찾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며 “또 매일 아침 10시 29분 유가족들이 앞장서 159km 탈레아 시민행진을 진행한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서대문 마포를 거쳐 여의도 국회의로 올 것이다. 매일 저녁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야당 대표들을 비롯해 민주당 우원식·정청래·남인순·박찬대·이동주·김용민·강민

정·서영석·박주민·최혜영·신현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이정민 유가족 대표 직무대행,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 후 오열하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유족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상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뒤 오열하는 유족을 포옹하고 악수를 건넸다.

민주, 12일 의총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등을 논의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열린 원내대표단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12일) 오전에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주안을 얻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당내 여러 그룹에서 의견을 냈다”며 “이를 공유하고 원내대표단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출 기준에 대한 질의에 “기존 관행부터 시작해서 새 기준

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광범히 많이 세세하게 소개하긴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내부 안을 만들어 오는 12일 의총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잡재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잡재 후보군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너무 빠르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후보군을 접촉해 상임위원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